

SK, 노사갈등 심화 “조정 신청”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 ... 무리한 단체협상 요구에 불가피

2005년 11월부터 9개월째 단체협약 개정 협상을 진행하다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교섭중단을 선언했던 SK가 7월1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SK는 “교섭중단 이후에도 가능한 조정신청을 하지 않기 위해 지방노동청이 참여하는 실무교섭을 제안했으나 노조가 응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조정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SK 노사가 단체협약 개정협상을 시작한 것은 2005년 11월 초로 노조는 80여개 조항에 300여개 요구안을 들고 나왔다.

핵심 쟁점은 교대 근무자의 주 38시간 근무, 정기 상여금 900%(현 800%)로 인상하고 해고자 2명 복직, 조기 퇴직을 전제로 한 부자 세습 고용, 조합활동에 대한 기업측 동의절차 삭제 등이었다.

교대 근무자의 주 38시간 근무제는 현재 4조 3교대제를 5조 3교대제로 바꾸어 주 40시간 근무를 2시간 더 줄이자는 것이고 해고자 복직은 사내 해킹과 상사 폭행으로 해고돼 대법원에서 정당한 해고로 판결이 난 2명을 복직시켜 달라는 것이다.

조기 퇴직을 전제로 한 부자 세습 고용제는 조기에 퇴직하는 대신 자식을 입사시켜 달라는 것이며, 조합활동에 대한 해당기업의 동의절차 삭제는 근무시간 중에 조합 활동을 하기 위해 동의를 받던 절차를 없애 달라는 것이다.

주 5일제로 축소되는 휴일의 유지 및 임금보전과 쟁의행위 기간의 급여 전액 지급, 인사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고용안정위원회와 경영발전위원회 구성 등도 요구했다.

노사는 지금까지 27차례의 본 교섭과 34차례 실무교섭 등 모두 90여 차례 협상했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7월4일 SK는 교섭중단을 선언했다.

SK는 축소되는 월차휴가의 10년분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등 특별 보전해주고 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해 임금체계 개선과 복리후생제도 등을 협의하자고 했고 경조금 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20-250% 올리고 의료비는 50-100%까지 인상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해고자 복직은 단협의 대상이 아니고 주 38시간 근무는 국내 어느 기업에서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부자 세습 고용은 사회적 지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인재 확보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2005년 11월 9일 상견례 이후 본 교섭과 실무교섭, 집중실무교섭을 병행했고 6월 들어서는 특별 실무교섭을 벌이는 등 무려 89차례 교섭하고 대표이사가 노조를 3차례 면담했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SK는 “최고경영자(CEO) 면담을 비롯해 90여차례 협상하면서 노조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려 했으나 해고자 복직과 주 38시간 근무 등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며 교섭을 지연시켜 어쩔 수 없이 조정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SK 관계자는 “노조 요구안이 대부분 단협의 대상이 아니며 최근의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하고 무리한 것으로 모두 수용하려면 2000억원 이상 투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SK의 제시안은 동종기업보다 못할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내용이었다”며 “일방적이고 비상식적인 교섭 중단과 조정신청을 철회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산=연합뉴스 서진발 기자) <저작권(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7/18>